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정치학)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손호철입니다. 우선 우리 시대에 몇 되지 않는 ‘소금’인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 창립 3주년 심포지엄에 ‘여는 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련·동구(소위 ‘현존사회주의’)가 몰락하자, 후쿠야마라는 정치학자가 인류의 역사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승리로 끝났다는 ‘역사의 종말’론을 펴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부터 불과 30여 년이 지난 현재, 세계는 극우 포퓰리즘의 폭발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현시대는 민주주의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제 위기, 1대 99 사회라는 양극화의 위기, SNS와 유튜브의 폭발 속에 공론장의 붕괴와 가짜뉴스독재의 위기, 인공지능(AI)에 따른 노동과 인류종의 위기, 인류를 넘어 지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위기, 코로나 19가 보여준 팬데믹 위기 등이 중첩된 유례없는 ‘복합위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부르는 정치체제가 자본주의 시대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자유주의는 선택과 자유, 따라서 민주주의이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 선택의 박탈, 따라서 독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문득 22년 전 베네수엘라 차베스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참석했던 ‘신자유주의반대 세계지식인 대회’가 떠오릅니다. 한 참가자가 차베스에게 ‘민중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PD)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뜻이 민중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앞에 왜 민중이란 접두어가 또 필요합니까? 민중적이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democracy는 그리스어로 demos의 kratos의 합성어로 ‘다수 민중의 지배’라는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민주주의의 원조인 그리스 시대에도 이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는 ‘폴리스(polis)’였고 democracy는 이의 타락된 형태로 ‘우민정치’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사실 democracy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약 100년 정도) 않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민주주의, 정확히 이야기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전개를 위해, 충분조건부터 논의해 봅시다.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자유권’이라고 부르는 사상,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입니다. 세계정치학계가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른 1980년대 세계민주화를 이론화하면서 정식화한 것이 ‘특정한 사상이나 정당을 금지하는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제한적 자유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공식을 바꿨지만, 보수적이지만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측정기관인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대만의 민주주의는 1등급이지만 대한민국은 1.5 등급입니다. 대만은 공산당을 합법화했지만,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통선거권입니다. 이승만, 박정희정권이 보여주듯이, 보통선거권이 있다고 모두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선거권이 없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주목할 것은 근대 들어서도, ‘주류사회’는 민주주의를 보통선거권과 같은 것으로 인식해, 불온시하고 ‘빨갱이의 주장’으로 치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보통선거권=사회주의=‘무산자독재’로 이해한 것입니다. 보통선거권이 도입되면 쪽수가 많은 무산민중이 정치를 지배해 사회주의를 할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사회민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여서, 보통선거권이 도입되면 선거에 의해 사회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혁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념비적 저술을 남긴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보통선거권에 반대해 자본가는 4표, 노동자는 1표를 행사하는 차등선거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나아가 자유주의의 역사는 ‘백인 유산자 남자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다름없고, 보통선거권과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동의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발달했습니다. 예란 테르보른의 역사적인 논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수백 년이 됐지만, ‘선진국’조차도 보통선거권, 따라서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1926년, 프랑스는 1946년, 노동자 힘이 강했던 독일은 1919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늦는 1965년 (아프리카계 투표권 부여)에야 보통선거권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각입니다. 우선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엥겔스는 계급사회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며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재산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현대대의제 국가의 선거자격이 그러하다.” 주목할 것은 엥겔스의 이어지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산의 차이를 정치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결코 본질적이지 않다. 거꾸로 그런 특징은 국가발전이 낮은 단계가 있을 때의 특징이다. 최고의 국가형태인 민주공화제는...공식적으로는 더는 재산의 차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민주공화제에서 부는 자신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더욱더 확실하게 행사한다.” 그는 노동자와 여성에 대한 투표권 제한에 대해 “봐라.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의 도구이지 않느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이하게도’ 이는 자본주의가 ‘덜’ 발달했기 때문이며 보통선거권과 민주주의, 즉 ‘민주공화제가 자본주의의 최상의 정치적 외피’라고 주장합니다.

왜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다른 계급사회(전자본주의)와 달리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이며 그러면서 계급지배가 가능하다고 봤을까요? 마르크스 <자본 3권>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현실의 노동자가 자기 생활의 생산수단과 노동조건의 점유자(possession)이기도 한 모든 형태에서는 소유관계는 동시에 직접적인 지배종속의 관계로 나타나며, 직접적인 생산자는 부자유인으로 나타난다...이런 조건에서는 명목적인 토지소유자를 위한 잉여노동은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서

만 강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종속관계와 토지에 종속시키는 것-진정한 의미의 예측-이 필요하다” 이를 뒤집으면, 생산자가 생산수단과 노동조건 점유자가 아닌 경우(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자본주의)에는 잉여노동 수취에 경제외적 강요가 불필요하므로 신분적 예측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릅니다. 쉽게 말해, 봉건사회에서는 노동과정과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농민이라 최종생산물 쌀이 농민 손에 있으니 생산 후 사후적으로 물리력으로 수탈해야 해서 신분적 예측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자본주의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잉여노동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취하니 정치적 예측이 불필요하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허용하더라도 수탈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허용해도 이는 공장문 앞에서 멈춥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선거권과 민주주의에 반대하던 자본주의가 1900년대 전반기에 들어 민주주의를 수용한 것은 왜일까요? 테르보른이 잘 지적했듯이, 우선 계급투쟁, 밑으로부터의 압력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수용할 수 있었던 현대자본주의의 ‘팽창성’과 ‘탄력성’입니다. 제국주의(식민지 수탈)를 통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물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축적체제’의 변화로 장시간 저임금의 ‘유혈의 테일러주의’로부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포드주의’로 변화한 것입니다. 야경국가와 테일러주의는 노동자들의 궁핍화에 의한 ‘과소소비’로 인해 대공황을 가져왔고, 이는 한편으로는 뉴딜(이명박이 생각하듯이 단순한 토목공사의 ‘노가다 뉴딜’이 아니라 와그너법 등을 통해 노사협상 등을 제도화한 ‘사회적 뉴딜’)이라는 국가개입(‘국가독점자본주의’)과 ‘사회국가’(‘복지자본주의’)로의 변화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화, 조립라인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 상승에 임금 상승을 연계해 이를 통해 대량소비를 유도하는 포드주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자가용 타는 노동자’)들은 체제 내에 ‘통합’됐고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자유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자본주의’로 변한 것입니다.

변증법에 따라, 시장의 실패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한 ‘국가’는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문제’로 변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며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 탈규제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소련·동구가 망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NAFTA, WTO체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혁명’(STR) 등으로 기본적으로 장치산업인 포드주의도 위기에 처하면서, 기술발전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드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비정규직이 일상화됐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봉합되었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갈등이 다시 본격화되어 ‘민주주의 과잉론’속에 ‘포퓰리즘적 권위주의’, ‘야금야금형(creeping) 권위주의’, ‘신파시즘’이라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나타났습니다.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부상과 함께 철강, 자동차산업 등 미국의 ‘산업벨트’였던 중북부를 ‘러스트벨트’로 추락시켰고 저학력백인노동자 등 ‘신자유주의의 패배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주의와 같은 극우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은 공론장의 붕괴와 정파적 가짜뉴스 지배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시켜 민주주의의 원래의 뜻과 정반대로 ‘다수민중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상황’(야샤 몽크 책 제목, *People vs Democracy*)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세계화는 2008년 월스트리트발 세계금융위기를 가져왔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막대한 비용은 혈세라는 방식으로 ‘사회화’하고 다시 생겨난 이윤은 ‘사유화’하는 모순이 심화되며 자본주의는 점점 ‘비생산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흡혈귀 자본주의’의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가 보여주듯이 ‘포스트신자유주의·신중상주의’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약 백 년간 지속되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불안한 공존’이 근본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둘의 공존을 가능하게 했던 자본주의의 팽창성과 탄력성이 위기에 처한 데다가 이를 추동했던 밑으로부터의 압력이 약화되고 계급 등 사회적 힘의 관계가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퓰리즘은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대안세력(‘정통좌파’와 ‘제 3의 길’이라는 ‘좌파 신자유주의’)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중적으로 외면당할 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고 역전된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역전시키는 것인데, 그 대안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좌파 포퓰리즘’인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기여자가 박근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거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국민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엘렌 우드라는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를 모두가 칭송하는 ‘보편적 선’으로 만든 ‘민주주의의 보편화’ 뒤에는 민주주의를 사소한 것(단순히 선거의 문제)로 축소하는 ‘민주주의의 사소화(Trivialization)’가 숨겨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누가 공장과 작업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는 ‘작업장 민주주의’, ‘노동자 자주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민주주의와 시민권이 공장 문 앞에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의 ‘공장전제정’을 산업민주주의, 임금노동자기금 등을 통해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1960년대 페미니즘운동이 내건 구호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는 선거, 노조 같은 소위 ‘공적 영역’을 넘어서 가족 등 ‘사적 영역’과 일상성에도 적용됩니다. 젠더, 성소수자, 청소년 등과 관련된 ‘일상성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제관계의 민주화’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들 문제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생산은 단순한 물질의 생산이 아니라 “생산의 사회적 조건의 생산”입니다. 생산을 위해서는 도로망 등 기간시설로부터 임금노동자들의 교육, 법제도, 화폐제도 등 생산의 사회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경제’는 존재하지 않고 ‘자유방임 시장경제’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순수한 경제에 국가와 정치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 속에는 국가와 정치가 ‘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자본주의는 ‘국가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피켓테로운동(연금생활자들의 도로점거운동 등)이 보여주듯이 공장이 아니더라도 생산의 사회적 조건에 타격을 가하면 자본주의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민주주의 투쟁을 단순히 선거를 통해 국가를 점진적으로 장악하는 투쟁으로 인식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사고는 자본주의 국가를 중립적인 도구로 인식하는 ‘도구주의적 국가론’에 기초한 잘못이며, 자본주의 국가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분쇄한다고 생각하는 전

통적인 좌파의 시각도 국가를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물(thing)으로 인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투쟁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국가성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국가는 결국 ‘사회적 힘의 관계의 물질적 응집’입니다.

복합위기의 암울한 시대지만, 그런 만큼 더 많은 민주주의 투쟁, 더 많은 ‘탈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